

# 6·25전쟁이 남긴 命題와 課題

은 창 일\*

1. 6·25전쟁의 성격
2. 이념의 배타성과 동족상잔으로서 6·25전쟁
3. 전쟁과 평화의 유기체적 양면성
4. 위장 평화와 소망 평화의 위험성
5. 동맹의 필요성과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의 중요성
6. 한반도 내의 평화 구축과 한국의 재통합을 위한 과제

## 1. 6·25전쟁의 성격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과 중공의 동지적인 후원으로 강화된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한을 침공함으로써 시작된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치러진 현대의 전쟁이다. 전쟁사(戰爭史)에서 핵무기의 등장은 이를 대대적으로 동원한 전쟁의 한 유형인 핵전쟁을 상징하게 만들었으나, 이 전쟁에 관한 한 다른 영역에서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

---

\* 전 육군사관학교 전사학 교수

된 전쟁 본질론의 적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이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라고 지칭한다면, 6·25전쟁은 분명 현대 전쟁이었다. 현대 핵무기 체계의 엄청난 파괴력과 지속적인 잔류 살상효과는 이를 운용한 핵전쟁(核戰爭, nuclear war)을 현실보다 관념세계의 전쟁 형태로 남겨놓아야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양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현대 이전의 전쟁을 재래식전쟁(在來式戰爭, conventional war)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그러나 전쟁과 전략의 개념과 실제 전개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서도 정치, 이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6·25전쟁은 따라서 관념적인 핵전쟁을 상정한 채로 현대에 구체화된 재래식전쟁으로서 현실적인 셈이다.

전쟁이 핵전(核戰)과 재래전(在來戰), 즉, 다른 차원과 분야에서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운용될 수 없는 전쟁과 그럴 수 있는 전쟁으로 이원화된 현대에 치러진 6·25전쟁은 이의 확산(擴戰, escalation)을 막으면서 설정된 정치, 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대 국지제한전(局地制限戰, limited local war)의 성격과 면면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당사국 입장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전면총력전 혹은 그 이상이었으나, 이를 실제로 연출한 소련이나 이의 수행 효과를 보장해주지 않으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원수단이나 전장 면에서, 국지제한전이 었다. 양국은 그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무언의 합의(tacit bargaining)에 의해서 전장도 한반도로 국한했으며, 전투 과정에서 특정한 목표의 공격도 상당기간 동안 혹은 끝까지 자제하는 전략적 고려도 잊지 않았다. 특히, 한반도에서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원치 않았던 소련은 자국 대신 중공으로 하여금 미국과 싸우도록 조종함으로써 주적(主敵, Enemy No. 1)인 소련이 연출한 전쟁에서 부적(副敵, secondary enemy)인 중공(中共)과 싸워야 하는 미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sup>1)</sup> 미국의 맹방으로서 유엔을 위한 미국의 “평화유지” 군사작전 수행 명분을 실질적으

1) 온창일, 『韓民族戰爭史』(서울: 집문당, 2001, 2008), p. 941.

로 뒷받침해준 영국은 서부 유럽의 방위에 필요한 미국 전력의 과도한 소모를 우려하면서 “적절한 선에서의 종결(enough is enough)”을 원했고, 미 합참의장(Omar N. Bradley, 1893-1981)도 한반도 문제로 인한 중공과의 확전은 “잘못 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잘못 선정된 적과 싸우는 잘못된 전쟁(the wrong war,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and with the wrong enemy)”에 미국을 말려들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sup>2)</sup> 이러한 전황 전개와 정책 및 전략 판단은 6·25전쟁을 현대의 국지제한전으로 만들어 군사적인 승패가 아닌 정치적 타협에 의한 휴전으로 마감하게 한 주 요인이 되었다.

전투 수행 방식과 장소 그리고 전쟁의 마무리 면에서 보면 분명 국지전이고 제한전이었으나, 현대가 지닌 특징의 하나인 이념 대결 면에서 보면 전면전이고 총력전이였다. 전차와 야포 등 중장비와 전투기, 함정까지 지원하고, 전투수행을 위한 교육, 훈련은 물론 전쟁계획 수립, 전쟁 수행단계와 방안도 지도한 소련의 스탈린은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공 모택동의 병력 투입 약속까지 확보하고 중국 내전(1927-1949)에 참여한 조선인들과 이들의 전투지휘능력(commanding capability)까지 북한에 공급하도록 거간(居間)하는 등 전폭적 지원을 주도했다.<sup>3)</sup> 소련은 당시 공산진영에

2) Statement by General Bradley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and Foreign Relations Committee, RG 218, General Bradley's Files(1951), National Archives, Washington, D. C. USA; MacArthur Hearings, pt. II, pp.731-732; Harriet D. Schwar, "Bradley, Omar N.," James I. Matray, ed.,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New York, London: Greenwood Press, 1991), pp. 62-63.

3) 大韓民國 外務部 譯, 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이후 蘇聯極秘外交文書), 3, pp. 60-65; Stalin's cable to Ambassador Shtykov, January 30, 1950; Shtykov's cable to Stalin, January 31, 1950; Stalin's cable to Shtykov, February 2, 1950,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Evgeny P. Bajanov and Natalia Bajanova,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Based on Soviet Secret Archives(unpublished, hereafter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pp. 36-37. 당시 중국의 毛澤東은 1944년 스탈린과 장개석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한 중·소 조약을 폐기하여 신강성과 동북 3성(만주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하여 소련의 경제원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었으며(1949. 12. 16.- 1950. 2. 17), 1950년 1월 20일에는 周恩來도 합류하여 毛澤東과 같이 있었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毛澤東과도 김일성(金日成)이 요구한 “군사적 모험”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 동원할 수 있는 지원과 후원을 모두 북한에 제공하여 한반도 전체를 공산 세력권으로 흡수하려 했다. 세계적인 이념 대립에서 공산권의 세력 확장을 차단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권을 보호해야겠다고 판단한 미국 역시 유엔을 통하여 거의 모든 자유진영 국가의 실질적 혹은 명목적인 지원과 참여를 확보했다. 이 결과 6·25전쟁은 동·서 양 진영 간 대리 전쟁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심지어 폴란드, 체코와 같은 동구권 국가들과 인도 등 비동맹권 국가들은 물론 스위스, 스웨덴 등 중립국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전쟁에 참여한 전면전이 되었으며, 상대 진영의 이념적 가치나 원칙 등을 훼손시키는 모든 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총력전이 되었다. 그리하여 공산 측과 유엔 측은 1951년 11월 27일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휴전이 성립되면 잠정적으로 합의된 군사분계선을 휴전선으로 결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교환 원칙(자유송환 vs 강제송환)에 대한 이견으로 전쟁 자체를 1953년 7월 27일까지 더 수행하는 결과를 감수했다. 지상의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공산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공산 포로가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자유 진영이 활용할 수 있는 대공 심리전 자료가 되었고, 이와 정반대 이유로 공산 측은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장에서의 인명손실보다 이념대결에서의 체면손상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와 같이, 6·25전쟁은 이념 대립으로 형성된 동·서 양대 진영 간 전면적인 총체전이였다.

또한 온갖 종류와 형태의 작전이 수행된 전쟁이었다. 선전포고없이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공격과 방어는 물론 낙동강 전선이 형성될 때까지의 지연전, 이 과정에서 철수와 철퇴 등의 후퇴작전도 수행되었으며,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선 돌파작전과 지역 및 기동방어의 작전 형태도 구체화되었다. 전세 전환을 위하여 실시된 인천상륙작전, 그 후에 전개된 돌파 및 추격작전, 평양 탈환 후에 전개된 공수작전(空輸作戰), 충분한 공중 엄호없이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의 야간교란 및 공격작전과 뒤이은 포위작전, 그리고 차단된 후방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방향을 바꾼 듯한” 공격을 통한 후퇴와 지상과 해상에서의 철수작전 등은 물론, 교착된 전선에서 전개된

진지전(陣地戰)의 특징을 나타낸 참호전(塹壕戰), 고지쟁탈전(高地爭奪戰), 수색정찰전(搜索偵察戰) 등 지상작전 형태와, 공중전 근접지원 및 후방 전략폭격 등의 공군 작전, 그리고 해안 봉쇄, 해안 포격, 해상 항공 폭격, 해상 수송 등과 같은 해군 작전과 양공(陽攻) 혹은 양동(陽動) 작전 등 교범에서 취급된 거의 모든 육·해·공군 작전이 망라된 전쟁이 6·25전쟁이었다. 이른바 이러한 정규작전 외에도 비정규작전인 유격전, 후방교란 및 침투작전, 그리고 지리산에서 후방 보급선을 위협하고 민간인들을 괴롭혀온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대대적인 “토끼몰이식” 공비토벌 작전 등도 현실화되었다. 실로, 6·25전쟁은 거의 모든 정규, 비정규 작전을 포괄하면서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6·25전쟁은 현대에 치러진 재래식 전쟁으로서 그 시대·상황이 지닌 모든 성격과 특징을 머금고 치러진 전쟁이었다. 군사적으로 국지제한전이었으나, 이념적으로는 전면총력전이었던 한국전쟁은, 따라서 작전지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었으나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전쟁에 참여한 전쟁이었고, 전장에서의 혈전 못지않게 휴전 회담장에서의 설전도 격렬했으며, 그 결과도 중요시되는 전쟁이기도 했다. 6·25전쟁은 현대의 전쟁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나 학자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실증적 자료를 머금고 있는 정치·군사적 보고이기도 하며, 한반도 내외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이 전쟁은 따라서 군사내외의 모든 분야에 금과옥조같은 명제를 남겼다. 승패가 아닌 휴전으로 마감되어 또 다른 전쟁(顛覆戰)을 그 결과로 남긴 6·25전쟁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은 물론 한국전쟁을 치른 관련국들이 슬기롭게 풀어야 할 과제도 던져 놓았다. 6·25전쟁 발발 60주년에 즈음하여 이 전쟁이 남긴 이러한 명제와 과제를 들춰보고 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노력이 아닐 수 없다.

## 2. 이념의 배타성과 동족상잔으로서 6·25전쟁

6·25전쟁은 전 지구 및 한반도 차원의 이질적인 이념대결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 공산사회주의 이념은 자유자본주의 이념과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 출현했다.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와 더불어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가 집필한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 1848년 출간)에서 집약된 공산주의 이념은 원래 서구 자본주의의 병폐가 완숙되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이념체계라는 점을 유물론적 변증법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입증하려는 사상체계였다. 즉, 자본주의가 성숙될수록 그 병폐 또한 극대화되어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필연적으로 공산주의가 이를 대치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핵심당원들은 대중을 선동한 혁명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사상이었다. 그러나 이 사상은 농노제도(農奴制度, serfdom)에 기반을 둔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한 초기 자본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던 러시아의 혁명적 전통을 활용한 레닌(Vladimir I. Lenin, 1870-1924)에 의해서 맑스-레닌주의(Marx-Leninism)라는 다소 영성한 이념체제로 변질된 채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 소련 연방 국가(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라는 정치적 실체로 등장하였다.<sup>4)</sup> 이로부터, 공산·사회주의 이념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즘(Fascism: Revolution against Revolution이라고도 일컬어짐)에 대항하여 서구 자유·자본주의와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1991. 12. 15) 자유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온 자유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이념은 일제 식민치하에서 벗어나려는 한국민의 독립 운동이나 해방 후 사태

---

4) R. R. Palmer, Joel Colton, A History of the Modern World(New York: Alfred A. Knopf, Publisher, 1978), pp.690-730; Robert O. Paxton, Europe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Atlanta: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5), pp. 125-164.

진전 과정에서 한반도의 모습이 갖추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구세주적(救世主的: messianic)인 속성을 가진 양 이념체계를 가진 미국과 소련이 한국민의 독립을 위한 지도자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기지가 되었으며, 이들 두 강대국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직접 군정(軍政)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대륙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한 한국의 독립 운동은 코민테른(Komintern: Communist International, 레닌 등의 지도하에 결성된 국제공산당 기관, 1919-1943)이나 코민포름(Kominform: Communist Information Bureau, 소련, 동구권 국가, 프랑스, 이태리 등 9개 국 공산당이 설립한 국제 공산주의 기구, 1947-1956) 등으로부터 독립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흡수하게 되었고, 미주 지역 등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주로 미국의 자유자본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짐으로써 자연스럽게 두 개의 사상 및 이념체계가 한국민에게 스며들었다. 더구나 두 이념체계를 대변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군정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1945-1948) 이들 상충적인 두 이념(理念: ideology)은 한반도 내외의 후원을 받아 두 개의 정치 실체로 한반도에 내재화(內在化)되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 결과, 한반도에는 하나의 한국 대신 두 개의 한국이 수립되었고, 이를 소련이 주축이 된 공산권과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사안(事案)을 결정하는 국제연합(國際聯合: the United Nations, 1946-)이 그 존립을 보장하였다. 이로써 두 이념체계는 미국 및 소련에 의한 전 세계적인 대립구조와 맞물려 자신들의 주도하에 정치권력을 우선 장악하고 이를 한반도 전역에 확대하려는 남북한, 특히, 북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한 정부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적 타협마저 거부한 채 한반도 내에 정착되었다. 더구나 한반도에 수립된 두 정권실체나 이를 후원하던 미국과 소련의 정치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이념 대립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들 이념체계가 지닌 구세주적인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공산주의의 수령격인 소련의 스탈린 수상은 1921, 2년에 소련이 겪었던 엄청난 기근 해소를 위해서 레닌이 도입했던 친 자본주의 정책의 하나인

“새로운 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의 결과 생성된 Nepmen(영세 기업인)이나 Kulak(부농) 등을 집단수용소에 집어넣은 다음, 완전한 집단화를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혁명 1세대를 철저히 숙청한 공산사회주의자였다.<sup>5)</sup> 북한에서 소련의 후원하에 정권을 잡은 김일성은 만주의 중학교 2학년 중퇴(1929)로 정상적인 교육을 마감하고 1935년부터 중국 공산당 유격대에서 활동하다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소련으로 들어가서 88경찰 여단 1대대로 편성되어 경찰임무를 수행하였다.<sup>6)</sup> 김일성(金日成)은 1945년 9월 19일 소련 군함 “부가초프”호로 50여 명의 인원을 데리고 입북하여 정치장교 레베데프 소장, 민정 담당 로마넵코 소장,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중장과 갖은 방법으로 친교를 유지하여 소련 수상 스탈린의 “낙점(落點)”까지 확보하는(1946. 7월경) 기민함을 과시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1949년 9월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 건의를 스탈린이 받아들이지 않은 후에도 이에 수긍했고, 1950년 1월 17일 평양주재 소련대사(Terenti Shtykov)를 통해서 남한 무력침공을 건의하면서도 “그가 스탈린의 명령을 법으로 간주하는 훈련된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Further, Kim Il Sung stressed that he himself could not launch an offensive because he is a communist, a disciplined person and orders given by comrade Stalin are law for him)”는 자신의 입장이 스탈린에게 전달되도록 했다.<sup>7)</sup> 이와 같이, 북한을 장악한 소련의 수상 스탈린은 철저한 공산사회주의자였고, 스탈린을 수령으로 받들었던 북한의 김일성 역시 스탈린에 철저히 순종하는 같은 부류의 지도자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과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은 공산사회주의를 혐오하는 정

5) Nicholas V. Riasanovsky, *A History of Russia*(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 541-544.

6)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청계연구소, 1989), pp. 3-50. 6·25 당시 민족보위성 작전국장, 유성철 1차 심문 결과(서울, 1990. 9. 13).

7) Shtykov's cable to Stalin, January 19, 1950,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pp. 1-5, quoted in *The Korean Conflict of 1950-1953*, p. 35.



치 지도자였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붉은 파시즘 (Red Fascism)”으로 보아 히틀러의 나찌즘(Nazism)과 다를 바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상원의원 시절, 무기 대여법(An Act to Promote the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약칭, the Lend-Lease Bill, signed into law on March 11, 1941)에 의하여 독일과 싸우던 소련에 원조를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트루먼은, “독일이 이기면 소련을 도와야 하고 소련이 이기면 독일을 도와야 하니까, ... 그들끼리 되도록 많이 죽이게 내버려 두어라(If we see that Germany is winning the war we ought to help Russia and if Russia is winning we ought to help Germany, and ... let them kill as many as possible)”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sup>8)</sup> 그리고 그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한 감정적 요인, 군사적 필요성, 그리고 소련을 일본의 군정에 참여시키지 않으면서 외교적 우위를 향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sup>9)</sup> 실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파시즘이건 공산주의건 통제와 독재를 기반으로 한 전체주의 사상과 이념체제를 싫어하는 자유자본주의자였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역시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이를 계승한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싫어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 시절(1899. 1-1904. 8) 러시아의 피터대제(Peter the Great I, 1672-1725)가 남긴 유언(顧命)을 번역하면서 러시아의 팽창적 대외정책 기초를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렸고, 이를 이은 소련이 기존의 질서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체제를 내세우자 러시아에 대한 공포증(Russophobia)과 소련에 대한 반공 사상까지 지니게 되었다. 미국 워싱턴 대학(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07)에서 학사, 하바드 대학에서 석사(European History, 1908),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American Diplomatic History, 1910)학위를 취득한 이승만은 무도한 러시아의 후예인 소련이 무법(無法)

8) The New York Times, July 24, 1941, quoted in Thomas G. Patterson, et. al., American Foreign Policy: A History (Lexington, Massachusetts: D. C. Heath and Company, 1977), p. 382.

9) *Ibid.*, pp. 429-439.

적인 공산주의로 사상으로 무장되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반공 사상과 반소(反蘇) 입장을 결코 감추지 않았다.<sup>10)</sup> 일본의 진주만 기습 후, 미 국무부에 한국의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한 이승만은 미 국무부가 한국 독립운동단체들의 상호화해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워 이를 거절하자, “미국 측의 말대로 공산당과 단합하려면 공산당을 만족시켜야 할 터인데, 공산당은 자기측이 정권을 장악하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공산당에게 항복하기 전에는 미국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 국무부의 요구를 일축했다.<sup>11)</sup> 해방 후 귀국한(1945. 10. 16.) 이승만은 공산치하에서의 삶을 노예생활로 비유하면서 미국과 군정 당국이 공산주의자들을 잘 모르는 “순진무구함”에서 비롯된 미국 정부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언행을 주저하지 않았다.<sup>12)</sup> 이러한 반공, 반소적인 태도와 이에서 비롯된 미국에 대한 공격적 언행으로 이승만은 소련에게는 반드시 “배제해야 할 인물”이 되었고, 미국 정부에게도 결코 “달갑지 않은 정치인”이 되었다. 어찌됐든,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 반소주의자였다.

이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국가 지도자와 이를 후원한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 간의 사상, 이념적 이질성은 공존과 평화보다는 대립과 충돌을 빚어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6·25전쟁의 근원적 한 원인이 되었다.

공산사회주의와 자유자본주의 간 이념적 배타성과 구세주적 속성은 또한 민족의 동질성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고 밀도 역시 진하여 동족상잔으로서 6·25전쟁을 빚어냈고, 군사적인 손실보다도 이념적인 손상을 더욱 중요시하는 요인이 되었다. 사실상 소련의 조종을 받으면서 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한반도 전역에 확장하려는 정

10) 유명익,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p. 2: 122-123; 155-156; Henry Chu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War and Peace, 1943-1960*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0), pp. 17-18; 81-85.

11) 이정식, 『해방 전후의 이승만과 미국』, 유명익 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p. 405-435, 직접인용문은 p. 421.

12) 前掲書, pp. 423-426.

치욕구까지 덧붙여 남한의 동족에게 총칼을 겨눈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비인간적인 잔인성은 동족에게는 물론 인간에게도 허용이 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인간적인 존엄성 존중이나 인도적인 배려는커녕 최소한의 상식적 예의마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전쟁을 군사적인 승패가 아닌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마무리하기 위하여 휴전회담을 진행시켜 1951년 11월 27일 잠정적인 군사분계선(유예기간 1개월)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 및 유엔 측은 포로교환 원칙(자유송환 vs 강제송환)에 합의하지 못하고 전쟁 자체를 1년 8개월이나 더 수행해야만 했다. 6·25전쟁 기간 37개월(3년 1개월) 중에서 반이 넘는 20개월 동안 양측은 전과보다는 이념적인 원칙의 수호를 위해서 싸운 셈이 되었다. 다른 말로 바꾸어, 양측은 군사적인 손실보다 이념적인 손상을 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6·25전쟁이 바로 군사전(軍事戰)이면서 이념전(理念戰)인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6·25전쟁은 한반도 내외에 정치된 상반된 이념(공산사회주의 vs 자유자본주의)의 배타성이 빚어낸 동족상잔의 전쟁이요, 미국과 소련이 대변하는 구세주적인 이념과 이에 근거하여 형성된 동·서 양대 진영 간 대리전이기도 했다. 군사적인 승패도 중요했지만 이념적인 우열도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전쟁이었다.

### 3. 전쟁과 평화의 유기체적 양면성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전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쟁과 평화의 상관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전쟁이었다. 원래 전쟁과 평화의 역사는 그 기원을 같이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나폴레옹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를 관찰한 프러시아의 군사이론가(Carl von Clausewitz, 1780-1831)는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another means)”라는

전쟁 본질론을 주장함으로써 당시까지 있어왔던 목적 달성 수단으로서 전쟁의 효용성을 집약해서 표현했다.<sup>13)</sup> 실로, 수단으로서 전쟁의 효용성에 관한 본질론이 정립되기 전까지도 거의 모든 전쟁은 군사적 혹은 군사외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널리 운용되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프러시아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치른 보오전쟁(1866)과 보불전쟁(1870-1871)이 그 대표적인 전례(戰例)였다. 그러나 전투행위의 격렬함과 전쟁의 잔혹한 비인간적 속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전쟁을 혐오하고 이를 기피하려는 성향을 갖도록 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총칼을 버리어 삽과 쟁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순진한 평화론에서부터 전쟁을 법적인 규범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이론과 한 국가의 국내 정치질서가 전쟁의 원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정치질서를 순화해야 한다는 입장까지도 등장하여 전쟁을 회피하거나 이를 규제하려 했다.<sup>14)</sup>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전쟁 자체를 연구한 방대한 학문적 업적도 나타나 있다.<sup>15)</sup> 이와 같이, 전쟁을 잘 수행하여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전쟁사와 이를 제거하거나 규제하려는 평화유지의 역사는 그 기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역사적 측면에서 그 기원을 공유하고 있는 전쟁과 평화는 실제적 원인이거나 양상 면에서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전쟁을 목적 달성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유혹은 사실상 군사력의 전면 사용을 전제로 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즉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판사판적 결정이 아니고 인간

13)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pp. 605-610.

14)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한 국제법 학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나 영구 평화를 위한 제안을 한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영구 평화만이 정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고 이를 인간의 이성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등이 대표적 평화론자들이다. 온창일, 『전쟁론』(서울: 집문당, 2007), pp. 9-11.

15) 대표적 예로서, Quincy Wright, *A Study of War*(Chicago and London: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42)를 들 수 있다.

의 이성적 판단이 이성적인 한 인간이 승산이 없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상대로 하여금 전쟁을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직접적인 방편은 상대가 상정한 전쟁에서 승산(勝算)을 도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상대가 계획할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도록 유도하면 전쟁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상대가 전쟁을 도모하지 못하도록(伐謀)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이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 보유하여 상대가 도저히 무력을 사용할 수 없는 전략적 불균형을 정착시키거나, 상대가 전쟁보다는 평화적 관계유지가 훨씬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도록 정치적 상황을 조성하는 두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수상(Arthur Neville Chamberlain, 1869-1940)이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전쟁을 피하려 했던 유화정책(peasement policy)이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점을 상기하면, 전쟁을 막아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가 전쟁 자체를 승리로 종결시킬 수 없고 오히려 패배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오관이나 환상에 근거하여 전쟁을 일으킨 상대 역시 실제 전투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패배를 안겨줌으로써 전쟁을 빨리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하려는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1941-1945)에서 온갖 특공작전(特攻作戰: 萬歲, 神風, 櫻花, 回天 등)을 수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려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일본이 수용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함으로써 일본의 전쟁지속 의지를 소멸시켜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전쟁 자체를 막고, 막지 못한 전쟁을 종결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다시 말하여,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일어난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켜 평화를 회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은 평화를 파괴하는 수단인 셈이다. 역설적이긴 하나,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이 곧 평화를 유지, 회복하는 수단이라는 말이다. 전쟁과 평화는 이러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이러한 관계는 이때저때,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감응적 현상중의 하나이다. 음(陰)이 양(陽) 속에 스며들어 양색(陽色)을 띠고 양이 음 속에 숨어서 음색(陰色)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낮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밤이 되고 밤의 어두움이 밝음에 스러져 낮으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사랑 속에 미움이 스며들어 있고 미움 역시 사랑의 한 표출양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의 관계는 무심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음양, 밤낮, 사랑과 미움이 서로를 머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평화 역시 각각의 발현 시작, 전개, 종결의 과정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한 말로 표현하여, 평화가 전쟁의 씨앗을 안고 있으며, 전쟁이 평화의 싹을 머금고 있다는 말이다. 전쟁과 평화는 이와 같이 상호 유기체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서 치러진 6·25전쟁은 전쟁과 평화의 이러한 유기체적인 연관을 드러내면서 구체화되고 마감되었다.

먼저, 정치집단의 생존영역에서 본 한반도의 운명은 한반도 내에 거주해 왔던 한국인들 스스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점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가 지닌 성격과 구조를 결정지어 주었다. 한반도를 쟁탈대상으로 삼고 펼쳐진 청일전쟁(1894-1895)과 러일전쟁(1904-1905)에서 정치적 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인 자위노력도 기울일 수 없었던 한국인들은 일본을 패망시켜 국가적 주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결과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독일에 이어 일본을 패망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서 군정(軍政)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들 간의 세계적인 대립구조가 한반도에까지 정치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의 상황은, 그것이 전쟁이든 평화든지 간에, 이 두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과 전략, 그에 근거한 개입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펼쳐진 정치, 군사적 상황전개가 미국과 소련이 세계적으로 그려냈던 질서와 이들이 바라본 한반도의 위상에 대한 정책과 전략적 판단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는 뜻이다.

전 세계적으로 정착된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적 대립구조와 한반도에 대한 이들 두 국가들의 정책 및 전략적 판단은 한반도 남과 북에 수립된 두 개의 한국 간 대립을 심화시켰고, 남북 간의 극심한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시켰다. 미국과 소련이 지향하는 구세주적인 이념체계의 이질성과 이들이 벌인 영향권 유지 혹은 확대노력은 전 세계적인 냉전구조를 정착시켰고, 편이적으로 설정된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평화적 해소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미국 역시 자국의 내해(內海)처럼 간주한 태평양 방어선의 한 축을 형성한 일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소련의 한반도 장악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할 사태진전이었다.<sup>16)</sup>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 한국 정부를 수립하려 했으나, 소련 역시 자국 판단에 따라 이를 거절함으로써 한반도에는 두 개의 한국 즉, 북한과 남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북한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소련의 정책 및 전략적 안목과 남한에 대한 미국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판단한 소련은 북한을 이를 위한 전초 기지로 간주했으나, 소련의 한반도 장악만 저지하면 된다는 판단을 한 미국은 유엔의 권위로 수립된 남한 자체의 존속, 유지로 만족했다. 북한은 공고하게 진지화되었고 북한군은 강화되었으나, 한국은 민주화는 되었으나 혼란스러웠고 한국군은 남한 내 치안유지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약체로 남게 되었다. 해군 보강을 요청한 북한 수상 김일성(金日成)에게 공군력의 지원까지 약속한 소련 수상 스탈린(Stalin)과 탄약이 2-3일분밖에 없다고 하니 탄약을 비롯한 최소한의 군사원조만이라

16) 미국과 소련의 합의하에 구성된 미소 공동위원회 최초 모임에서 소련 측 대표(Terenti F. Shtykov 중장)는 대표 연설에서 "...한국은 진정한 민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고 장차 한국이 소련 침공을 위한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련에 충직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장차 수립될 한국 정부는 전 세계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The New York Times, March 21, 1947: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pp. 460-462.

도 제공해 달라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군사력의 유지보다는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여지를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서신을 군사원조로 대신한 미국 트루먼(Truman) 대통령의 회신이 빚어낸 한반도 남북 간 군사적 불균형이었다.<sup>17)</sup> 이렇게 조성된 군사적, 전략적 불균형은 이를 의도적으로 조성한 북한과 공산 측에게는 승산을 내릴 수 있는 사실적 자료가 되어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어쩔 도리없이 이를 맞이하게 된 한국에게는 평화를 지키지 못한 소이연이 되었다.

평화는 공격적인 구호나 정치적인 협상만으로 지켜질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명제를 6·25전쟁이 입증해 주었다.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실상이 허전해서 그러했든지 아니면 정치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했든지 간에 “북진통일”을 구호로 사용했고, 한국군 지휘관들도 이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는 한국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의 군사원조 제공을 오히려 저해하여 최소한의 군비를 갖추는 것 자체도 방해했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한에서조차 “...우리는 2일분의 탄약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38선 이북의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군사원조를 “애걸”해야만 할 정도였다.<sup>18)</sup> 북진은커녕 북한군의 남진조차 막을 능력과 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구호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히려 이러한 공격적 구호와 이를 뒷받침한 한국군의 행동은 전쟁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북한과 이를 지원하던 공산 측을 자극하고, 그들이 자행한 전면 남침 공격을 합리화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

17) 蘇聯極秘外交文書, 3, pp. 6-10: Stalin's conversation with the DPRK's government delegation, headed by Kim Il Sung, March 5, 1949,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pp. 1-11, quoted in Bajanov's *The Korean Conflict,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pp. 4-6;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대한 정책 및 전략 차이에 대해서는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pp. 465-475 참조.

18)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yngman Rhee) to President Truman, August 20, 1949, *FRUS, 1949, VII*, pp. 1075-1076.



다.<sup>19)</sup> 허세에 기반을 둔 공격적인 구호만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희망은 실로 허망하다는 사실을 6·25전쟁이 밝혀준 셈이다.

군사력으로 전쟁을 막지 못하고 평화를 지키지 못한 대가는 대단했다. 초기 전투 수행 3일 만에 실탄과 탄약이 고갈된 한국군의 전력은 말이 아니었으며,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개입도 북한군의 남진을 막지 못했다. 막강한 유엔 해공군의 제공, 제해권 조기장악과 이로 인한 전력고갈, 보급차단, 주간 작전제한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한국군과 미군을 낙동강 선까지 몰아부쳤으며,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데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의 눈부신 성공으로 북한군이 거의 소멸되고 유엔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루지 못한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이 군사작전에 의해서 가능할 듯해지자, 중공이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라는 명목으로 개입하게 됨에 따라 전선은 교착되기에 이르렀다. 전쟁을 시작한 공산 측이나 이를 막아야 했던 유엔 측 모두 한국 문제가 매우 복잡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군사적 승패로 마감하지 않고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측은 1951년 7월 10일 한국전쟁을 군사적 승패가 아닌 명예로운 휴전으로 마감하기 위한 휴전회담을 개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설전도 전장에서의 혈전 못지않게 격했다. 한국전쟁이 동서 양 진영을 대리한 이념전(理念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황폐화된 한반도, 240여 만의 인명피해, 10여 만의 전쟁고아, 30여 만의 전쟁미망인, 그리고 400만이 넘는 전쟁 이재민과 1,000만의 이산가족을 결과로서 남기고 1953년 7월 27일 전쟁 전의

19) 민족보위성 작전국장 유성철 1차 심문결과(1990. 9. 13), 유성철은 진술에서 서울 점령 후 경무대에서 한국군이 작성한 북진계획을 노획했다고 말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이러한 계획을 세운 한국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이를 그들의 목적에 부합되게 심리전 자료로 심분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한국 신성모 국방장관은 1950년 1월 24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실지 회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므로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다가 하면, 5월 10일에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현재 우리 해군은 일단 유사시에 동서 이북에 대한 하고 싶은 행동을 어디까지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韓民族戰爭史』, pp. 490-491.

상태가 약간 변형된 채로 마감되었다.<sup>20)</sup> 전쟁을 막아 평화를 유지하지 못한 대가는 실로 엄청났다.

전투행위의 증지에 불과한 휴전이라는 이름의 불안한 평화마저도 전투수행과정에서의 막강한 군사적 압박 없이는 확보하기 힘든 평화였다. 말을 바꾸면, 불안한 평화마저도 휴전회담 천막 안에서의 정치적 협상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결과였다는 뜻이다. 공산 측은 38선을 휴전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회담 자체를 거부했고, 유엔 측은 이들을 다시 휴전 천막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적 압력을 가했으며, 포로의 자유스런 의사를 존중한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1년 8개월 동안 전쟁을 더 계속해야만 했다. 전쟁 피해보다 체면 손상을 더 중시하는 이념전의 성격을 한국전쟁이 지녔기 때문이었다. 지키지 못했던 평화, 그것도 불안한 평화의 회복도 정치적 협상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6·25전쟁이 입증해준 셈이다.

이와 같이, 6·25전쟁은 전쟁과 평화의 유기체적 양면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전쟁을 막지 못하면 평화는 없고, 전쟁을 막는 방법은 평화적인 것만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과 방법은 평화적일 수 없고, 오히려 평화를 파괴하는 수단과 방법, 즉, 전쟁수행 수단과 방법이 평화를 유지시켜 준다는 명제를 한국전쟁이 남겨 놓았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Si vis pacem, pare bellum: If you wish for peace, prepare for war)”는 과거 로마 격언의 실질적 타당성이 되새겨진 셈이다.<sup>21)</sup> 불안한 평화마저도 군사적인 압박 없이는 확보가 어렵다는 전쟁수행과정을 보면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이해하라(If you want peace, understand war)”는 한 영국 군사이론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이해하여 이를 제대로 대비하라”는 또 다른 명제를 도

20) 한국전쟁(6·25전쟁)의 결과, 성격, 영향은 『韓民族戰爭史』, pp. 1025-1031 참조.

21) Robert A. Fitton, ed., *Leadership: Quotations for the Military Tradition*(Boulder, San Francisco, Oxford: Westview Press, 1990), p. 220.

출할 수 있을 것 같다.<sup>22)</sup> 6·25전쟁은 전쟁과 평화의 이러한 유기체적 상관성을 사실적으로 입증해준 전쟁이었다.

#### 4. 위장 평화와 소망 평화의 위험성

6·25전쟁은 북한의 위장 평화와 한국의 소망 평화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었다. 전쟁 발발 전에도 이 점은 그러했고, 전쟁이 휴전(休戰)으로 마감되어, 최소한 형식상, 남북체제 간 총체적인 대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금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치르는지도 모르면서 치르고 있는 새로운 전쟁(顛覆戰)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될 수도 있는 오늘의 평화가 어떠한 성격의 평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 그렇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38선은 평온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1949년 3월 5일과 7일 김일성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난 이후부터는 비교적 평온을 유지했다.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건의한 김일성에게 스탈린은 남쪽으로 진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하면서, 그 이유로서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해서 월등한 우세를 확보하지 못했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개입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38선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점을 들어 한국군이 먼저 공격할 경우를 제외하고 38선은 평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23)</sup> 공산 진영의 수령인 스탈린의 명령을 법으로 간주하는 충성스런 공

22) B. H. Liddell Hart, Strategy(New York, Washington: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1967), pp. 373-382.

23)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governmental delegation of the DPRK headed by the Chairman of Cabinet of Ministers of the DPRK Kim Il Sung, March 7, 1949,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pp. 3-4, quoted in The Korean Conflict of 1950-1953: The Most Mysterious War of the 20th Century, pp. 17-18; 『韓民族戰爭史』, p. 469.

산주의자 김일성은 이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이 결과 1949년 3월 이후 38선은, 국지적인 접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온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러한 내막을 알 턱이 없었다. 그리하여 자체 판단으로 비상경계령을 발령했다가 38선이 조용하면 해제하고, 또 발령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자기중심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스스로 취한 조치에 스스로 지쳐있었다. 그러다가 한국군은 1949년 말 북한군이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각 사단의 방어계획을 취합한 육군본부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38선 고수방어 개념을 공식화하면서 후방 사단들을 추진시켜 이를 보강한다는 극히 개괄적인 계획을 작성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전방 각 사단들을 통제, 협조시킬 수 있는 통신수단은 물론 지휘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후방 사단 병력을 전방으로 추진시킬 어떠한 수단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군 본부의 방어계획은 각 사단의 것들을 단순히 취합해 놓은 것에 불과했다. 한국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공격이 1950년 3, 4월경에 감행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 시기도 그냥 지나갔다. 그 해 5월 1일 북한군의 남침과 남한에서의 폭동에 대비하여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대기 및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또 5월 30일 총선거를 대비하여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평화공세를 맞은 한국군은 6월 11일부터 23일까지 비상경계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북한군이 공격대기 지점에 집결하여 공격 기세를 올리고 있었던 1950년 6월 23일 24시를 기하여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한다는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6월 24일 저녁에 육군회관 준공연회를 열어 참모총장과 그 참모,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다. 전후방 장병들은 휴가, 외박, 외출을 실시하여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북한군이 공격 예봉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던 순간, 한국 육군 참모총장 예하 지휘관들은 여흥(餘興)에 젖어 있었고 병사들은 외출, 외박,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sup>24)</sup>

북위 38도선 이하 남한 지역에서의 이러한 상황전개는 바로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 원하던 것이었다.

24)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pp. 493-494.

실질적으로 북한군을 증강시킨 소련의 스탈린은 형식상 1950년 1월 17일 김일성의 건의를 받아들여 1950년 1월 30일 북한의 남침공격을 승인하고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들였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이 제공한 특별기편으로 1950년 3월 30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4월 25일까지 머물면서 스탈린과 세 차례 면담을 가졌다. 이들 면담에서 스탈린은 그가 북한의 남침공격을 승인한 이유와 이에 대한 준비 및 작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전쟁지도를 실시했다.<sup>25)</sup>

스탈린은 먼저 국제환경이 바뀌어 한국 통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스탈린은 중국이 공산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국이 아시아 대륙에 대해서 불개입 정책을 택한 듯하며 이는 북한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소련과 중국이 동맹 조약을 서명하여 미국은 아시아 지역 공산주의 세력에 도전하는 것을 더욱 망설일 것이며, 소련이 원자탄을 보유하게 되어 (1949년 8월 실험 성공)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 강화되었다는 세 가지 유리한 상황변화를 들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중공의 모택동(毛澤東)과 상의하고 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필요하다면 병력도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sup>26)</sup> 김일성(金日成)의 모험에 모택동(毛澤東)의 지원 가능성을 확실하게 내비친 것이다.<sup>27)</sup>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화력과 기동력이 증강된 정예 공격사단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소련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격 계획까지도 지도했다. 공격계획은 3단계로 계획,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첫째, 병력을 38선 가까운 곳에 집결시키고, 둘째, 북한의 최

25) Report on Kim Il Sung's visit to the USSR, March 30-April 25, 1950,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CC of the All-Union Communist Party(Bolshevik),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quoted in The Korean Conflict of 1950-1953, pp. 40-42.

26) 前掲書.

27) 사실 중공의 모택동은 1949년 12월 16일에서 1950년 2월 17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으면서 소련과 동맹조약에 서명했다. 이 기간 중에 김일성의 계획에 대해서 스탈린과 모택동이 상호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권력기구는 남한이 반드시 거절할 새로운 평화통일 방안을 제의하여 남한이 이를 거절하면 즉시 반격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김일성이 제시한대로 남한군의 공격을 유도하여 이를 공격 구실로 활용하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국이 개입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다섯 번째로 미국이 지상군으로 개입하더라도 소련은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점은 모택동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스탈린은 북한군이 1950년 여름까지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그때까지 소련 군사고문단들의 도움을 받아 상세한 공격계획을 완성하라는 지시도 빠트리지 않았다.<sup>28)</sup> 스탈린의 전쟁지도는 매우 자세하고 자상했다.

스탈린의 지시대로 김일성과 박헌영은 1950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북경(北京)에 머물면서 모택동과 회담을 가졌다. 김일성이 3단계 공격계획을 설명하자, 모택동은 미군 개입 가능성을 김일성에게 물었다.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김일성에게 모택동은 “약한 병력을 먼저 공격하고, 도시를 점령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와 더불어,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련보다 미국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중국이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sup>29)</sup> 이로써 형식상 김일성이 요구하고 스탈린이 승인, 지원하고 모택동이 동의, 참여한 북한의 남침공격, 즉 6·25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김일성은 북한 헌법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통하여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평화적 통일방안을 제시했다.<sup>30)</sup> 스탈린

28) 前掲書.

29) Roshin's cable to Stalin, May 16, 1950, Archives of the President of Russia, quoted in *The Korean Conflict of 1950-1953*, pp. 50-53; 『韓民族戰爭史』, pp. 472-474.

30) 북한 헌법에서는 이승만을 포함한 남한 대부분 정치인들을 반동분자로 지목하여 이들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였고, 남한의 비 공산 단체 거의 전부를 반동 단체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북한 헌법에 따른 총선거에서는 노동당원이 아니면 출마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어 북한의 평화통일 방안은 한반도 전역에 공산 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안과도 같은 방안이었다. 이것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것은 반드시 남한이 거절할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라는 스탈린의 지시에 부합되는 제안이었다.

과 김일성의 의도대로 남한은 이를 거절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적극적 지원과 모택동의 동지적 후원에 힘입어 남한을 침공함에 있어서 스탈린의 지시대로 “38선을 연한 평온함”과 “평화통일 방안”을 머금은 위장평화)까지를 전쟁 수행의 한 단계로 활용했다.

실로, 전쟁 전에 전개된 북한의 위장평화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더욱 기습적으로 만든 한국의 소망평화는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아주 먼 위험한 성질의 평화였다.

6·25전쟁이 승패가 아닌 휴전으로 마감된 후에 남북한 간에는 새로운 성질과 형태의 전쟁이 지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군사력의 전면사용으로 남한의 공산화를 달성하지 못한 북한은 궁극적으로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중국 내전(1927-1949)이나 월남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기록한 새로운 전쟁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시키려 했고, 지금도 이를 포기했다는 명시적인 언사나 정책 및 전략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중국내전(1927-1949)이나 베트남전쟁(1954-1975)에서 구체화되어 결말이 난 전복전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sup>31)</sup>

그 성격상 전복전은 모든 폭력적, 비폭력적 수단, 즉 모든 군사적, 군사 외적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 치러지며, 그 기간도 전복시키고자 하는 체제나 정부가 전복될 때까지 다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진행되는 “이상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통상 몇 단계를 설정하여 진행될 수도 있으나 설정된 단계를 동시에 진행시키거나 건너뛴 수도 있고,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을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활용하면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운용을 통하여 체제나 정부를 전복시키는 전쟁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나 협의, 공동성명 발표는 물론, 적과의 동침이라는 개념하에 중국내전에서의 국공합작(國共合作, 1차: 1924-1927, 2차: 1937-1945)과 같은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하고, 월남전에서 구정 휴전(1968)과 같은 잠정적인 휴

31) 전복전 개념의 심도있는 분석은 盧在鳳, 『現代戰爭體界와 平和』, 李昊宰 편, 『韓半島 平和論』(서울: 법문사, 1989), pp. 155-168; 월남과 한반도에서의 전복전 실제 전개에 관해서는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pp. 1035-1046 참조.

전의 합의 등을 도출하기도 하나 어떠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상대의 전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증거를 조작 혹은 창작하여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여론 자체를 호도하는 행위도 주저하지 않으며, 전복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시키기 위하여 공갈, 협박은 물론 무자비한 테러까지도 자행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한 말로 말하여, 모든 가용한 폭력, 비폭력 수단을 동원, 운용하여 상대 체제나 정부를 그의 국민, 동맹국들과 이간질시켜 고립시키고, 온갖 수법으로 군사력을 마모시키면서 사기와 전의를 저하시키며,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는 군사력을 집중 운용하여 상대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전쟁이다.

전복전 수행상 첫 번째 단계로서 전복전은 중국에서와 같이 이동 기지를 확대, 강화시켜 나가거나 월남에서처럼 월맹을 병영화하는 방법으로 원 기지를 강화시키고, 두 번째 단계로서 전복시키고자 하는 체제 내 반체제 세력을 조직하여 월남에서 베트콩을 조직하거나 중국 국부군 내의 동조세력을 강화하며, 세 번째로 원 기지와 보조기지와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네 번째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정부를 동맹국으로부터 이탈시켜 고립시키고, 다섯 번째로 고립된 정부나 체제를 집중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여 전복하는 단계를 밟는다.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국공합작을 실시한 후 장개석 정부 내 친 중공 세력을 심고, 미국의 지원을 차단한 후에 국부군을 대륙에서 축출하면서 중국인민공화국(중공)을 수립한(1949. 10. 1) 경우와, 월남에서 미국과 휴전을 성립시킨 다음(1972), 미군과 연합군을 철수시키고(1973), 미국 의회의 지원이 차단된 후에 월남에 일격을 가하여 전복시킨(1975) 경우가 대표적인 실례다. 이러한 수행단계에서 중공과 월맹은 군사력을 포함한 폭력을 때로는 집중적으로 때로는 산발적으로 적절하게 운용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보호하면서 상대에게 곤혹스런 상황을 강요함으로써 어떠한 합의, 휴전 등 일시적인 방편을 성사시키는 것도 병행했다. 이와 같이, 전복전은 모든 폭력적,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상대 정부와 체제를 전복시키는 전쟁이다.

휴전으로 마감된 6·25전쟁 후에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성격과 형태의 전복전이 진행되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전쟁 후에 김일성은 우선 박헌



영(朴憲永)을 비롯한 남노당을 미제의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소련파는 종파(宗派)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숙청하고, 중국의 연안파들은 분파(分派)운동과 더불어 전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제거한 다음, 북한 전역을 병영화하여 전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면서 원 기지를 강화했다. 그런 후에 남한에 간첩을 파견하여 반정부, 반체제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한국을 “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 몰아세워 한국 내 반미세력을 결성시켜 나가면서, 1·21사태(1968) 등을 통하여 한국 내의 혼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7·4 남북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1972)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1992)에 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몸짓은 일련의 거짓 행동으로 판명되었다. 북한은 7·4 남북 공동성명서에 서명하면서, 휴전선 지하 땅굴을 팠으며,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두 번씩이나 실시했고, 한국에 대해서 공갈을 치면서 비료와 식량을 강요했으며, 북한의 외화수입원인 개성공단 통행을 막았다 풀었다 하면서, 금강산 관광객을 살해하기도 하는 등 온갖 파괴적 행위를 서슴지 않아 왔다.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북한이 무엇을 목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와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전복전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러시아로 변한 이후에는 “내식대로 살자”는 개념하에 냉전적인 파괴수단인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생존과 대외원조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북한이라는 원 기지의 약화는 실제로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 전복전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정책표명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아직도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대남, 대외 정책과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25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 전복전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sup>32)</sup>

실로, 북한은 7·4 남북 공동성명이나 한반도 비핵합의서 서명 등과 같은

32)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pp. 1041-1045.

화해 몸짓을 보이기도 하고, 6·15 공동성명의 발표와 같은 노벨 평화상 수상거리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민족 공조를 강조하는 평화지향적인 의사표시를 내비치기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바대로, 이러한 북한의 몸짓은 한국을 활용하여 미국과 접촉을 시도하는 이른바 “통남연미(通南連美)”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거나, 남한을 활용하여 미국을 압박하는(用南促美)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의 덕택으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미연합훈련(Team Spirit)을 중단시키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스스로의 자생력을 고양시키지는 못하고, 거짓으로 드러난 비핵합의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한 결과도 감수해야만 했다. 북한이 보여준 평화의 본질이다.

현실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북한이 구사해온 대남 전복전 수행과정에서 동원되었거나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평화가 아닌 평화(偽裝平和)라는 말이며,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기를 바라는 평화(所望平和)와 겹칠 때 그 위험성이 증폭되는 평화라는 뜻이다. 6·25전쟁 이전이나 이후에 한반도에서 현재화되었거나 되어온 이러한 위장평화와 소망평화의 위험성은 우리가 치른 전쟁과 지금 치르는지도 잘 모르면서 치르고 있는 이상한 전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 5. 동맹의 필요성과 합동 및 연합작전 수행의 중요성

한반도에서 치러진 6·25전쟁은 남북한, 특히, 한국에게 동맹의 필요성과 연합작전의 중요성을 각인(刻印)시켜 주었다.

북한은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김일성이 북한과 소련 간 우호·협력 조약 체결을 요구한다는 보

고를 받은 스탈린은 김일성을 1949년 3월 모스크바로 불러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양국 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비난거리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그 대신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해군 함정을 요구하는 김일성에게 공군기의 제공까지 약속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한 스탈린이었지만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사용은 상황 여건상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고(1949. 6. 30), 중공정부가 수립되었는데도(1949. 10. 1) 미국이 이를 방관하며, 소련의 핵실험이 성공을 거둔(1949. 8) 상태에서 미국무장관(Dean Acheson)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와 대만이 제외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자(1950. 1. 12),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이 요구한 남침 요구(1950. 1. 17)를 받아들이고(1950. 1. 30) 그를 모스크바로 불러 남한에 대한 전면 무력사용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남침 작전 지도를 철저하게 실시했다(1950. 3. 30-4. 25). 그리고 전쟁 중에 미군이 개입할 경우에 대비한 중공의 지원까지 알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sup>33)</sup> 이에 따라 소련은 북한군에게 T-34 전차와 122mm 야포, YAK-9 전투기를 포함한 200여 대의 항공기, 30여 척의 경비정과 해안포 등을 지원하고, 중공은 중국내전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지휘관과 병사들을 지원했다.<sup>34)</sup> 이와 같이, 북한은 실질적인 동맹국인 소련과 후원국인 중공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6·25전쟁을 일으켰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한 유엔의 상징적인 후원이 안전보장책의 전부였다. 남한에서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한국군의 위상과 역할을 남한 내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 경찰군(constabulary)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에 부합된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면서 목적에 부합한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거의 평가하지 않은 미 합참본부는 최초 한국군에게 105mm 야포 지원까지

33)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pp. 467-475.

34) 前掲書, pp. 486-492.

꺼렸으며, 호위 구축함의 지원도 거절하고, 훈련기(T-6)의 판매도 허락하지 않았다.<sup>35)</sup> 탄약이 2-3일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군사원조를 간절하게 요청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의 공한(1949. 8. 20)을 받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는 군사력의 강화보다는 경제개발을 서둘러 공산주의자들에게 책동구실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공한(1949. 9. 26)을 군사원조로 대신했다.<sup>36)</sup> 미국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단독 책임이나 한국군의 팽창은 물론, 한국정부가 제안한 유럽 지역의 NATO와 같은 "Pacific Pact" 등의 구성도 고려하지 않았다.<sup>37)</sup> 이로써 한국은 북한의 침공이 있을 경우,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남한과 북한의 두 후원국인 미국과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과 전략의 차이와 이에서 비롯된 지원 정도의 차이로 북한은 승리를 내다보면서 남한을 공격했고, 한국은 초기 방어조차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처지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무력침공으로 구체화된 전쟁을 치르면서 남한과 북한은 동맹국의 필요성과 합동 및 연합 작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경험을 했다.

35) "Should the Department of the Army reconsider and approve 105mm howitzer for issue to the Korean Constabulary?" August 3, 1948, in Memo for General Wedemeyer, sub.: Korean Request for U.S. Arms and Ammunition, August 23, 1948, RG 319, P&O 091 Korea, sec., V, cases 66, National Archives(NA), Washington, D.C., USA; JCS Decision on Request for Destroyer Escort Class Vessel for Korea, September 28, 1948, RG 319, P&O 091 Korea, sec., IV, cases 51-65, NA; 한국공군본부, 『航空戰史: 韓國戰爭(1989)』, p. 58; 전반적인 한국군의 창군과 전쟁수행 및 팽창에 관한 사항은 온창일, 「6·25전쟁과 한국군의 팽창」, 유영익, 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 Korea and the Korean War』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pp. 55-90 참조.

36)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Syngman Rhee) to President Truman, August 20, 1949; President Truman to President Rhee, September 26, 1949, FRUS, 1949, VII, pp. 1075-1076; 1084-1085.

37) Memo of Convers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with Chough Pyong Ok, Special Representative of President Rhee), July 11, 1949,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 December 14, 1949, FRUS, 1949, VII, pp. 1058-1059; p. 1108.

아무리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북한 단독으로 미국과 유엔의 권위에 의해서 탄생된 한국을 공격하지는 못했으리라고 판단한 미국은 북한의 무력행사는 소련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유엔의 권위를 빌려 신속한 정치 및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이사회는 6월 25일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의 침공행위를 중단하고 원상을 회복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군이 공격을 계속함에 따라 27일에는 유엔회원국들에게 침략을 저지하는 한국을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동경에 있던 현지 사령관 맥아더는 6월 29일 수원 비행장에 내려 퇴각하는 한국군의 전의가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을 한강 남쪽 제방에서 바라보아야만 했다. 미 지상군의 투입만이 한국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휘하의 미 지상군의 투입을 승인하였고(6. 30), 뒤이어 계속적인 증강이 이루어졌다. 유엔의 요청에 따른 미국의 개입으로 6·25전쟁은 북한군을 앞세운 공산 측의 침략과 유엔의 평화회복 군사작전으로 성격이 규정되어 영국과 영연방 그리고 다른 유엔회원국의 군대까지 참전함으로써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되고(7월 7일 결의안) 미국에게 작전 통제권이 위임되었으며, 미 합참이 작전을 지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하였다(1950년 7월 14일).<sup>38)</sup> 이제 6·25전쟁은 소련 및 중공의 지원을 받는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는 한국군 및 유엔군과의 전쟁으로 변모했다.

북한군은 미군을 주축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전선이 낙동강 선까지 남하하여 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의 눈부신 성공으로 전선은 38선을 넘어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 추진되었고, 북한군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전력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이에 북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소련 스탈린 수상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나, 스탈린은

38) 『韓民族戰爭史』, pp. 534-564.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공한의 표제는 "The Korean President Syngman Rhee to the American Embassy(July 15, 1950)"으로 되어 있고, 공한 내용은 Dear General MacArthur(July 14, 1950)로 되어 있다.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條約集』, 제1집, 1945-1980(1981), p. 630; FRUS, 1950, VII, p. 388.

모택동에게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스탈린은 미 지상군이 전투에 참여했다(1950년 7월 5일 죽미령 전투)는 보고를 받고 중국의 모택동과 주은래(周恩來)에게 “적이 38선을 돌파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만(韓滿)국경에 9개 사단을 집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을 발송하고, 이 부대들을 공군력으로 보호하겠다는 내용까지 통보해 놓은 다음에, 7월 13일에는 중국이 9개 사단을 한만 국경에 집결시키면 이들을 엄호할 124대의 최신에 제트 전투기를 보유한 전투비행사단을 중공에 공급하고, 중공군 조종사들도 양성시켜 주면서 필요한 장비도 공급하겠다는 전문도 보내놓고 있었다.<sup>39)</sup> 김일성과 박헌영은 모택동에게 지원요청을 했다.<sup>40)</sup> 소련과의 협상을 거쳐 중공은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라는 이름하에 “抗美援朝 保家衛國”이라는 개입목적으로 “陣地戰과 運動戰을 배합하여 적의 有生力量을 消滅”시킨다는 작전 방침을 세우고 중공군을 한국 전선에 투입했다. 이로써 6·25전쟁은 중공군, 북한군과 한국군, 유엔군이 대결하는, 맥아더의 언급대로, 새로운 전쟁이 되었다. 전투력이 소진되다시피 한 북한군을 대신하여 중공군이 전장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전선은 중공군이 벌인 5차에 걸친 공세로 전쟁 전에서 약간 변형된 상태로 복귀되어 교착(膠着)상태에 접어들었다.

사실상, 한국이나 북한은 지원국의 참전 없이는 본래의 모습을 지닐 수 없었다. 한국군은 미군을 주축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선을 지켜 북진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북한군은 중공군의 병력지원과 소련의 무기 및 장비지원에 힘입어 압록강, 두만강까지 북상한 전선을 남하시켜 전쟁 전의 모습을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나 북한은, 명시적이건 아니건 간에,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들 참전국의 군대와 연합작전은 물론 합동작전의 중요성도 간파할 수 있었다. 한국군은

39) 蘇聯極秘外交文書, 4, pp. 81-82; Coded message N 3172, July 5, 1950, Stalin to Zhou Enlai; N 3231, July 8, 1950, Stalin to Mao Zedong; N 3805, July 13, Stalin to Mao Zedong and Zhou Enlai, quoted in The Korean Conflict of 1950-1953, pp. 86-87.

40) 李捷 著, 『毛澤東與 抗美援朝』(中央文獻出版社, 2000), p. 12.

방어진 공격이건 간에 자신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해야만 연합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는 체험을 했고, 이 점은 북한군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쟁 전의 모습에서 약간 변형된 상태로 전선을 회복할 수 있었고, 북한 역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자국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군은 이들 참전국들과의 연합 및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소련의 지원과 중공의 후원을 받은 북한의 침공을 초전에서 제대로 막을 수 없었던 한국은 유엔의 명목적인 지원보다 동맹국의 실질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득하게 되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북한의 침공 전에 미국의 군사지원을 “애원하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또 다시 재현될지도 모르는 공산침략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엔의 “선언적 개입”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가시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것은 분명 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한 당시 미국의 의도(意圖)와는 거리가 있었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개입 자체를 가시화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란 미국의 판단과 한국의 국체보존을 위해서는 미국의 단독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고집스런 집착이 한미동맹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원력이 되었다. 유엔 참전 16개국 명의로 한반도에서 또 다른 공산 침략이 자행될 경우에 전장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 제재선언(a greater sanction proclamation)”을 발표하여 또 다른 공산 측의 군사도발을 억제하려 한 미국도 한국과 한국군의 협조없이 휴전이 보장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국민과 한국군 모두를 휴전반대 데모에 동원하면서 한미동맹을 원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어떠한 배열이든지 간에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sup>41)</sup>

한국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와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성사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서명, 1953년 10월 1일

41) 온창일, 『韓民族戰爭史』, pp. 1011-1019.

워싱턴에서 서명되었고, 한국 국회가 1954년 1월 15일, 미국 상원이 1954년 1월 26일 인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포로석방(1953. 6. 18)과 같은 큰 사건과 극렬한 내부 토론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구축된 한미동맹관계는 휴전으로 마감된 6·25전쟁 후의 혼란 상태를 극복하고, 현재화되었을지도 모를 또 다른 공산 측 전면도발을 억제하고, 이러한 안정위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한 초석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고양되고 그 전략적 비중이 증가된 현 시점에서는 한미동맹관계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평가되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내부 형상이 변화될 수 있는 미래에도, 동북아 지역의 특성상, 이의 비중과 중요성은 결코 소홀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한반도 내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까지 등장함으로써 한미 안보동맹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었으며, 한미 연합훈련(Op. Key Resolve)에서도 그에 합당한 훈련이 수행되고 있음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 6. 한반도 내외 평화 구축과 한국의 재통합을 위한 과제

휴전으로 마감된 6·25전쟁은 한반도 내 평화 구축과 통합을 위한 대책과 방안 마련을 그 과제로서 남겼다.

전화(戰禍)가 남긴 엄청난 인적, 물적, 자연적 피해와 전쟁의 잔인함이 가져다 준 엄청난 폐륜적 상흔은 전쟁을 막아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도록 해주었다. 이념적 집착과 배타성은 민족의 동질성을 무시하고 동족상잔을 빚어냈고, 이로 인한 전쟁의 잔인함은 인륜적 도덕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이에서 비롯된 후유증의 정도와 수준을 계속 높게 지속시켜 주었다. 이 결과 남북한 간에는 화해와 타협보다는 대



립과 갈등에 근거한 관계가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북한은 남한 정부와 체제를 완전하게 전복시키려는 새로운 전쟁을 정치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여, 현실적이건 아니건 간에, 북한은 남한을 협상과 대화의 대상보다는 활용과 타도의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그 관계를 지속시켜 왔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면서 남한을 “억박지르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중국체제의 안전상 북한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필요한 것을 챙기고,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체제의 실질적 보장책과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별 협상카드”로 이를 활용해오고 있다. 실로, 한반도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과 주변 관련국들은 한반도 내외의 평화유지가 결코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전개가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참화를 경험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 내외의 평화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더구나, 평화의 구축이나 이의 유지가 소망이나 기원만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익힌 한국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평화 구축 및 유지 방책과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보장해야 할 책무까지 떠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6·25가 한국에게 던져준 평화유지 과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반도 내외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즉,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정치집단, 북한이나 이의 잠재적 우방이 평화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거나 평화파괴보다는 평화유지가 더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를 파괴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무력사용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과 전쟁을 수단으로 택할 경우에는 북한 국체나 체제 자체의 보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능력과 수단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한국 자체의 능력과 한미동맹관계에서 미국으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억제 및 전쟁수행능력 보유로 가능하다. 한 말로 표현하여,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담당하여 무력화시키고, 대량살상능력 등 비대

칭 위협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를 사전에 무력화시키거나 북한이 이를 운용하기 직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잠재적 우방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현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북한이나 북한의 잠재적 우방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를 파괴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절실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대남 전복전 수행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명시적 정책과 전략을 가시화할 때까지 한국 내 반체제 세력의 형성과 이를 전복시키려는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차단하는 정책적, 전략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정부와 체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자정력을 강화시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면서 체제의 파괴보다 유지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수혜의 범위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 노력에 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 정부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려는 집단이나 세력들의 활동 자체를 봉쇄할 필요가 있다. 과거 허무주의나 무정부주의자들의 맹목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현상 파괴행위와 체제의 발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의 재통합을 위한 한국의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치집단으로서 남북한이 1945년 이래 엄연히 존재해온 사실 자체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이 두 이념과 이에 근거한 모든 분야의 체제와 가치 체계가 조화보다는 상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들 사이에 현실적인 타협이나 접합을 모색하려는 노력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 한 이념체계나 이에 근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체제가 파산되지 않는 한 그렇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분단과 6·25전쟁이 남긴 과제로서 한국민의 재통합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한국민의 혼합적 통합이건 아니면 융합적 통합이건 간에 통합된 정치집단으로서 새로운 한국은 인간 개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의 한국민에게 천부적(天賦的)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집단이어야 한다. 인간 개인이 어느 정치집단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감내하는 이유는 집단 형성을 통해서 개개인이 보장받기 어려운 새로운 차원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간의 존엄과 천부적 권리를 더욱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과거 공산사회주의 국가나 오늘의 북한처럼 사회유기체론에 근거하여 인간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구축된 이상한 정치구조인 수령체제는 한국민이 지향하는 통합된 정치집단의 성격이 될 수 없다.<sup>42)</sup> 이 논리와 체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별성은 물론 개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극도로 훼손시켜 한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와 번영 자체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이나 융합 등 어느 방식에 의한 한국민의 재통합 국가의 성격은 우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개별적 창의성을 통한 발전을 승화된 상태로 조화시켜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면서 집단적인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국가이어야 한다.

한국민의 재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배제되어야 한다. 한국민이 겪은 6·25전쟁이 무력사용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를 통한 한국민의 통합 시도였다고 본다면, 이러한 방식의 재통합은 한국민 모두가 막아야 될 수단과 방법인 셈이다.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인적, 물질 파괴와 정서적, 폐륜적 상흔은 자칫 재통합 자체의 당위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통합 수단과 방법이 재통합의 타당성이나 당위성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민의 재통합 과제를 떠맡아야 되는 한국은 인간 존엄성과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관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제를 확고하게 견지하고, 국가적 역량

42) 북한정치이념과 체제에 관해서는, 이상우, 『북한정치: 신정체제 진화와 작동원리』(나남출판, 2008)에서 명쾌하고 설득력있게 논의되어 있음. 특히, 사회유기체론은 이 책 pp. 145-156 참조.

의 현격한 제고와 체제의 시혜 범위 및 융통성의 증진을 계속 도모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내외의 평화유지와 한국민의 재통합이라는 과제를 능동적으로 구현해야 할 주체인 한 그렇다.

(원고투고일 : 2010. 3. 30, 심사수정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0)

주제어 : 핵전쟁, 재래식 전쟁, 국지제한전, 휴전, 냉전, 중국인민지원군, 위장평화, 소망평화, 전복전, 한미 안보동맹관계

&lt;ABSTRACT&gt;

## The Korean War(1950-1953), Refurbished Propositions, Proposals Be Solved

Ohn, Chang-il

The Korean War(1950-1953) has been known as a local-limited war in the total-war age. It was local and limited in terms of the location of battle-ground, the selection of military targets, the weapons systems employed, and the way to end the fighting. The war-zone was limited in the Korean Peninsula, Pyeongyang and Rajin were excluded from the UN bombing list until the Communist side became intransigent on the rule of Prisoners of War(POW) exchange at the truce talks, the nuclear devices were not used in spite of some demonstration through the military exercise of dropping a mock atomic bomb. Furthermore, the Korean War was not ended in a traditional way to distinguish the victor from the loser. Rather, it produced the two victors by terminating the fighting in a way of not unlimited but limited way, that is, an honorable armistice. In this regard, the Korean War could be defined as a local-limited war in the nuclear age.

However, the Korean War was not limited for the Koreans themselves. The Koreans, either of North or South, were not able to recover the status-quo ante-bellum by themselve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UN, the South could not defend their country and recover the 38th Parallel, too. The North Koreans could not regain their own territory should the Chinese troops not intervene. For this reason the Korean War was not a limited but rather a super-total war for the Koreans, because the Koreans, either of North or South, despite they spent all their expendable efforts and available resources, could not restore their

own government and territories anti-bellum by themselves.

Also, the Korean War was not limited in an ideological terms, because it was a proxy war, in a sense, between the East and West blocs, championed by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almost all countries, even Sweden and Switzerland, of the world took part in the fighting in one way or another from sending fighting soldiers, supplying weapons and equipments, medical services, assuming a role of facilitating or supervising the Armistice Agreement to even expressing verbal supports or oppositions. Even after the UN and Communist sides agreed to a demarcation line on November 27, 1951, the two sides could not accept the other side insistence on the rule of POWs exchange, that is, “forced” of the Communists and “voluntary” of the UN side. For this reason the two sides had to fight the war for another 20 months, more than half of the war period. Because of the ideological nature of the Korean War, the two sides, especially, Stalin(Joseph V. Stalin, 1879-1953), the head of Social Communism, and Truman(Harry S. Truman, 1884-1972), the champion of Free Capitalism, did not budge an inch on the issue of principle. Only after the death of Stalin(March 1953), the Communist side accepted the principle of free exchange of POWs, and both sides finish the fighting on July 27, 1953. In fact, the Korean War was an ideological war as much as military one.

The Korean War has left several important propositions to remember on the military and political matters, especially, the issues relating to war and peace. The exclusive nature of ideological coherence of communism transcend over the identity of the same race, which made the Korean War as a fratricidal war, no less cruel than a traditional war among nations. And this very nature also prolonged the war and contributed to ending the fighting with no end, a temporary truce, that was an unstable peace. Again, the Korean War proved the vitality of an old Latin proverb, “if you wish for peace, prepare for war,” and one British military historian’s advice, “if you want peace, understand war.” Shrewd enough, North Koreans employed a camouflaged peace as a means of conducting war so that they could achieve strategic and tactical surprise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fighting.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s believed this camouflaged

peace as a real one, especially, the South Korean military did not perceive the danger of this disguised peace. Another proposition was the importance of alliance and unified military operations to conduct and win the battles and campaigns between the indigenous troops and the allied forces, because, without the helps of the UN championed by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Chinese troops manipulated by the Soviet Union, both Koreans of the North and South could not reestablish their own governments and territories. In this way, the Korean War has refurbished important propositions well known before.

In many senses, the Korean War fixe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imposed for political reasons, in military way. But the North Koreans have conducted another nature of war, that is, a subversive war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ROK) since the end of the fighting, employing all kinds of means from extremely peaceful to violent. Fortunately,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help of security guarantee from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relationship, has prevented the escalation of this war and achieved a great economic success, 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still blackmailing the south employing nuclear and missile devices. Being faced these facts and strategic environments, nevertheless, the ROK Government and people should find the ways and means to keep peace in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nd to reunify the Koreans in a peaceful way through strengthening the self-defense and self-sustaining capabilities of their nation and regime. Maintaining peace in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and finding the ways and means to reunify the Korean people in a peaceful way are the proposals to be solved and achieved that the Korean War has bestowed on, especially, the ROK.

Key Words : Nuclear War, Conventional War, Local-limited War, Armistice, Cold War, the Chinese Volunteers, Camouflaged Peace, Wishful Peace, Subversive War, the US-Korean Security Alliance Relationship